

## 국감 마무리 예산戰 돌입

시·도·국회의원 역량 결집해야

국회가 27일 올해 국정감사를 마감하고, 국비 예산안과 법안 심의에 들어가면서 광주·전남의 미래발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 예산 확보에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시·도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일명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제활성화법과 공무원연금법, 세월호 3법 등의 처리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되면서 지긋지긋한 광주·전남이 내년도 예산확정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다음달 6일부터 예결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다음달 10~12일에는 부처별 예산 심사가 열리고, 24~28일 예산 계수조정위, 29일 예결위 심의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1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되는 등 뼈대있게 일정이 진행되는 만큼 그 어느 해보다도 지역 예산 확보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달 3일 예산 정책 간담회, 4일 재정차연합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갖고 내년도 사업 예산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국회 방문과 함께 국회의원 보좌관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실·국장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예산 따내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도는 우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핵심사업 예산을 일부라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해 놓고 있다.

특히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 조성 3D콘텐츠 미디어 산업 클러스터 조성, 2019년 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등이 그 것이다. 전남도 역시 정부안에 미반영된 남해안 철도(보성~목포) 건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국립 난대산림 치유단지 조성, 복합해양센터 건립 등 10개 사업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건의액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반영된 사업의 증액도 발등의 불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등산 정상개방 올해 첫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가 열린 지난 25일 탐방객들이 역새와 단풍 등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산행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무등산 부대 이전 '거꾸로 가는 軍'

공군부대 이전 여론 목살 ... '미사일방어체계구축' 신형 무기 배치 계획

권은희 의원과 간담회서 밝혀

무등산 정상부에 자리잡은 공군부대를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 당국이 이곳에 신형 무기 배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부대 이전 장기화가 우려된다.

<관련기사 2·6면>

무등산 공군부대는 국방부 소유 임야가 아닌 공·사유지를 점용·사용하며 광주시로부터 5년마다 사용 연장을 승인받고 있으면서도 향후 무등산 정상 개방에 관한 확답을 주지 않아 내년 정상 개방 여

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군은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국방위원회)과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및 정상개방 관련 간담회'에서 오는 2015년부터 무등산을 비롯 전국에 주둔중인 방공포대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10~30km의 낮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로, 군당국은 기존 호크미사일 대신 차량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공군 부대에 배치

함으로써 영공 및 영토 방위를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공군은 2020년대 초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간담회에서 "새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무등산 공군부대 이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신무기 재배치 과정에서 공군부대가 무등산을 떠나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공군은 이렇다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간담회에서는 무등산 정상에 주둔중인 공군부대 부지가 국방부 소유가 아닌 광주시와 화순군, 사찰 소유의 임야로 밝혀졌다.

공군은 5년마다 광주시에 사용연장 승인을 받아 무등산에 주둔중이며 내년엔 사용기한이 다시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사용승인 권한을 쥐고 있지 만 군사보호시설인 탓에 시가 사용연장

승인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군부대가 이전을 거부해도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행강제금 부과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간담회에서 공군은 향후 무등산 정상 개방 허가 여부에 관해서도 확답을 하지 않아 내년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공군은 또 무등산 공군부대 이전 대상 부지를 한 곳으로 정했지만 연차별 계획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다고 밝혀 부대 이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은희 의원은 "차량 탑재가 가능한 새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공군부대가 무등산 정상에 위치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시점에 맞춰 반드시 무등산 공군부대가 이전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지자체도 구조조정 '회생절차' 도입

정부, 월 내 입법예고

내년부터 유동성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긴박을 완화,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제도가 시행된다.

안정행정부부는 과도한 채무로 지급 중단 등 위기에 빠진 자치단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이 되면 건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 재정 자치권이 제한되고,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자치단체는 그러나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조중훈 순천시장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면 지방 자치권을 심각히 제약할 수 있다"면서 지방재원 확충 등 전제조건을 충족한 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60주년 기념 대학회**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11월 6일 저녁 7시 은혜관 3층 대예배실  
광신대학교 062)605-1130

**목포의 새 명물**  
**'남진 야시장' ▶ 11면**  
**치유의 인문학**  
**표창원 박사 강연 ▶ 22면**

## 나주 혁신산업단지

# 분양개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최고의 접근성, 기업투자 최적지!

합리적인  
분양가

편리한  
교통망

차별화된  
인센티브

경영시너지  
산업네트워크

**나주**  
**혁신산업단지**

분양문의

## (061)336-9916

**나주혁신산업단지(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덕산중앙길 49 (덕산리 581-42)  
TEL : 061)336-9916 FAX : 061)336-9917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덕산중앙길 49 (덕산리 581-42)  
TEL : 061)336-9916 FAX : 061)336-9917